

보도설명자료

(’22. 2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
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

(2.4일자 서울경제 「에너지 위기라며...민간에 떠넘긴 ‘LNG 비축」
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- ☐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(’21.8월)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(7→9일)한 바 있으나,
 -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

※ 문의: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 (044-203-5220) / 서성민 서기관 (044-203-5232)